

대법, 전두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5·18 당시 헬기시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낸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하는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

대법원 "관할이전 기각 결정 즉시항고 규정 없어" 전두환 "광주지법 재판 서울로 옮겨달라" 신청해 광주고법, 기각...대법원도 관할이전 재항고 기각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열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열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

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시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여수 무인텔 화재, 남녀 2명 숨진 채 발견

여수시 돌산읍의 한 무인텔에서 1일 화재가 발생해 진화했으나 객실에 투숙했던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무인텔 화재는 1일 오후 10시 58분께 4층 규모 무인텔 내 객실 30개 중 2층 객실에서 시작돼 30분 만인 오후 11시 28분께 진화됐다.

화재 발생 후 객실에 있던 A(31)씨와 여성 1명 등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숨진 2명 외 무인텔에 투숙했던 5명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9명은 구조됐다.

여수경찰서는 2일 화재 현장을 감시하고 숨진 투숙객의 동선을 조사하는 등 자세한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보성 주택 헛간서 불...1명 부상

보성의 한 주택 헛간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고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11월 30일 오전 11시35분께 보성군 미력면 A(77·여)씨의 주택 내 헛간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씨가 얼굴 등지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헛간 건물 20㎡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아궁이 주변에 있던 장작더미에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후배 집서 통장 훔쳐 돈 인출한 1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회 후배의 집에 침입해 훔친 통장에서 400만원을 인출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고교 1학년생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4월7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B(15)군의 집에서 통장을 훔친 뒤 일주일 동안 6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교회에서 알게 된 B군의 집에서 수차례 놀러갔으며, 현관문을 평소 제대로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빈집에 들어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군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계좌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서를 기억해냈다며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 "비밀번호 앞 두 자리는 우연히 보고 알게 됐고 나머지 두 자리는 누르는 위치를 보고 유추했다. 돈은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웹하드에 음란물 유포한 18명 무더기 검거

파일 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대거 유포한 해비 업로더와 업체 운영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33)씨 등 해비 업로더 5명을 구속하고, 모 웹하드 업체 대표 B(3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파일 공유사이트의 일종인 웹하드에 6만8000여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량으로 음란물을 올려 구속된 해비 업로더 5명 중 2명은 스마트폰 영상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도 있다.

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40대 여성 입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A(47·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9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에서 연제구 연산동까지 만취상태로 자신의 부산 승용차를 23k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대이사회 강동완 총장 직위해제 결정

정부의 대학역량평가에서 탈락해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조선대법인 이사회는 11월30일 오후 회의를 갖고 강 총장에 대해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간 직위해제 결정을 했다.

이사회는 담화문을 통해 "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은 대학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총장 거취와 관련한 학내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대학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출범에 모두가 관용과 인내심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혁신위원회에 대학역량평가 결과와 원인분석 및 3주기 평가 대책 마련, 대학 재정건전성 강화,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대비 등을 요청했다.

혁신위원회는 법인 관계자 2명,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창회 2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강 총장의 직위해제 기간 중 김재형 부총장이 총장직무를 대리한다.

이사회는 강 총장이 내년 2월28일 기한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구성원간에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돼 총장 직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대 기자



전좌석 안전벨트 매세요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한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실시한다.

"매일 116명이 10억원 빼앗겨"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2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73.7% 증가한 1802억원으로 피해자 수만도 2만006명에 달한다. 매일 평균 116명이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수치다.

주요 피해사례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금전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이 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사고 등을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정부기관 사칭형'도 단골 수법이다.

최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App)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 대화창에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돈을 빼앗는 지능적인 수법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올해 광주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사기범에게 수

억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을 설치하고 수수료와 공탁금 등을 빼앗긴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화 상대방의 소속 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